



자활한미당축제 25일 광주 서구 빗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자활한미당축제'에서 자활근로자와 센터 종사자 1천여 명이 율동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저출산·고령화 적절한 해법” “교육문제 경제적 논리 재단”

## ‘취학연령 1년 단축’ 찬반 의견 팽팽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학계,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찬성 측에서는 취학연령 단축이 저출산 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취학 시기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한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교육 경쟁력을 높여려면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만 6세가 취학연령이라고 하지만 학기 시작이 3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 6.2~7.2세에 입학하고 있어 다른 국가보다 취학 시기가 늦다”며 “4년의 대학생활과 군복무 등을 감안하면 사회진출 시점은 20대 후반까지로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영양과 발육상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져 성장단계와 맞아떨어진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반면, 상당수 교육학자는 취학연령을 앞당기겠다는 게 “아이들의 성장발달 상황을 무시한 경제적 관점에 의한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화여대 박은혜 유아교육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만 5세 취학 제도를 가진 영국에서조차 조기입학에 대한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 발달상황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이들을 먼저 학교에 보내면 예산이 절감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데 만 5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보육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느냐”며 “이미 3년 전 논의가 불거져 학부모, 전문가의 반대로 폐지된 안을 또다시 들고나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의견도 엇갈렸다. 찬성하는 쪽은 유치원비 부담이 줄 것을 기대했고, 반대하는 이들은 조기취학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반응이었다.

학부모단체 사이에서도 “양육비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찬성의견과 “초등학교는 4교시만 되면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부담이 된다”는 반대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교원단체와 유아교육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재단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강진군 ‘출산을 전국 1위’ 이유 있었네

## 셋째 출산 720만원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책, 군정 최우선 추진

대표적 농어촌 지역인 강진군이 출산을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그 비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진군은 25일 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저출산 대책 보고회에서 출산·양육지원 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강진군의 지난해 출산율은 2.21명. 전국 232개 지자체 평균 1.19명보다 배 가까이 많다. 2007년에는 보성(2.332명)에 이어 2위(2.259명)였지만 1위로 올라섰다.

출산율 1위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에 행정기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관심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외국에서 시집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적극적인 출산 의지도 한몫했다.

황주홍 군수는 이능과 학생 수 격차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군정을 펴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이에 따라 우선 귀농 우대, 지역교육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 등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보건의료 중심이 돼 임신부터 출산, 양육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폈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 아이는 연간 120만원, 둘째는 240만원, 셋째 이상은 생후 30개월까지 720만원 등 연간 11여 만을 지원했다.

임산부 초음파검진비, 출산 준비금, 출산용품 세트 등 50여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아이 이상은 매달 건강보험료(3만원)를 5년간 대납했다.

그러나 장려금이 최고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제법 쓸 줄하면서 이른바 주소를 옮겨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전출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의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출산율 상위인 농어촌 지자체가 모두 비슷한 현상으로 아이와 산모의 거주 여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행정력의 한계에 달한 인구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절박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상품거래소 유치 나선다

## 정부 2011년 설립 계획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광주 유치를 약속했던 한국 상품거래소의 설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광주시가 본격 유치활동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금과 원자재 등 상품 관련 거래를 전담하는 거래소 설립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

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단순히 금과 같은 귀금속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처럼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는 종합 상품거래소로 2011년 개 설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12월 완료되는 ‘광주 상품거래소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광주 설립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등 상품거래소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도 광주 등 호남권이 유력한 유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서울 여의도와 부산으로 한국거래소(KRX)가 이원화돼 있어 지역 균형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가닥’

# 균형발전 토대 혁신도시 수정 우려

##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축소·중단될라” 반발

정부가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에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알려지면서 현재 추진중인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경우 행정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공기업 분산 형태의 혁신도시 연계 방안도 틀어질 수 있어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애초 행정복합중심도시와 혁신도시에는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에 과밀한 정부 부처와 정부 공기업 등을 지역별로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었다.

행정복합중심도시를 수도권과 비교적 가깝고 국토의 중심이 되는 충남에 두고 정부 공기업들을 지역별로 분산할 경우 지역발전과 중앙부처 연계 등을 고려한 구상이었다.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은 입법부와 사법부, 청와대 및 일부 부처는 서울

에 남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 중앙부처 이전 전면백지화로 행정복합도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육·기업도시로 성격이 수정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내용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으로 충남지역으로 옮겨갈 산하기관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의 계획도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혁신도시의 변질없는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세종시 논란을 끝내면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는 혁신도시도 효율성과 경제성 논리로 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계속된 약속에도 지역민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에 보인 태도와 이전 기관들의 부지매입 미루기 행태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가 약속한 이전기관 연내 마무리 승인도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공공기관들의 ‘비협조적’ 이전 움직임에 정부가 사실상 ‘수수방관’ 하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전의 경우도 부지매입을 앞두고 부지 축소, 부지 매입비 할인 등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이 ‘껍데기 이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공공기관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했는데 혁신도시로 내려갈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이 정부기관은 이전하지 않고 산하기관만 가느냐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

다.

이렇게 될 경우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본사와 핵심 업무 기능을 서울과 수도권에 남겨놓고 부수 기능만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선임연구원은 “처음에는 중앙부처 축소 이전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전면 백지화로 정부가 말을 바꾼 것”이라며 “정부가 애초 세종시의 중앙부처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의 중앙부처 이전 백지화가 이뤄질 경우 전국 10개 혁신도시 수정도 일부는 변경될 것으로 본다”면서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것은 지역에 발전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핵심기능이 옮겨와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구상은 최소한 영·호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를 고려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